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78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라 분할납부율을 조정하고 분할납부 허용금액을 삭제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9. 9. 25. ~ 10. 15.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율의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 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제3조(분할납부)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4조(부담금의 증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및 영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20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분할납부)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현행	개정안
<p>③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p>	
<p>제6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p>	<삭제>
<p>제7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영 제16조의2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중 대전광역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삭제>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삭제>

관계법령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⑦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3일
3. 상 정 일 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 12. 7)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권식)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분할 납부율을 조정하고 분할납부 허용금액을 삭제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연정수)

- 본 개정 조례안은 중전 조례에서 인용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를 줄임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 삭제 정비 및 조례 체계에 맞는 표기 등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코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Ⅳ.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